

종교교육학연구 제15권. pp.127~151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원불교의 입장에서 본 정치와 종교교육

朴 光 洙

(원광대학교)

《요약》

초기 인류사회는 정교일치(政敎一致)의 사회체제이었으며 종교는 인류역사와 더불어 인류문명의 중요한 근간이 되어 왔다. 종교는 교육을 통해 종교적 신념만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지성을 가르치고 인간의 덕성을 함양하는 지덕합일(知德合一)의 전인교육(全人敎育)의 역할을 하여 왔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치의 세속적 권리와 신앙의 자유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정치집단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종교를 활용하거나 억압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공교육의 장에서 세속적 권리를 우위에 두고 종교적 측면을 배제하는 등 정교분리의 원칙을 잘못 적용하였다.

원불교(圓佛敎)의 입장은 정치와 종교를 불가분의 관계로 본다. 특히, 소태산은 정치와 종교를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하였으며, 한 집안의 엄부(嚴父)와 자모(慈母)의 관계로 설정하여, 자녀교육에 상호 긴밀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정산 송규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정교동심(政敎同心)'이라고 설정하였다. 원불교의 교육은 “세계를 진화시키는 근원이요 인류를 문명케하는 기초”로서, 교육을 잘하고 잘못함에 따라, 개인·가정·사회·국가의 성쇠와 흥망을 좌우하게 된다고 본다.

종교다원주의에 입각한 종교교육은 편향적이지 않아야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교육의 장은 종교를 포교 또는 선교를 목적으로 한 곳이 아니지만, 교육의 영역에서 종교의 영역을 제외시키거나 축소시켜서는 안된다. 종교학, 신학, 종교철학, 종교문화 및 종교예술 분야 등 학문적·문화적 영역과 도덕적 심성과 전인교육을 위한 종교적 내용이 공교육의 장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종립 사립학교와 국·공립 학교간의 학제 교류가 이루어져 학생교류, 공동수업, 학점인정 등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핵심 주제어: 원불교, 정치, 종교교육, 정교분리(政敎分離), 정교동심(政敎同心), 종교다원주의

I. 서론

종교는 인류역사와 더불어 인류문명의 중요한 근간이 되었다. 초기 인류사회는 종교와 정치의 뚜렷한 구분을 두지 않았으며, 사제장(司祭長)이 곧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교일치(政敎一致)¹⁾ 즉,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사회체제이었다. 종교는 인류사회에 가치와 규범을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화시킴으로써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여 왔다.²⁾ 종교의 믿음체계는 종교의례의 형태를 통해 나타나고 종교의례는 그 집단의 믿음을 강화하고 확증할 뿐만 아니라, 종교집단의 목표와 일체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과 의례를 통한 실천적 행위는 예술과 전통풍습 등 인류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여왔다.

전통사회는 정교일치의 사회이며, 단일종교사회로서 “신앙교육부터 사회 일반의 교육전반을 담당했으며, 그 교육방법도 주로 경전과 교학연구, 종교체험을 통한 것이었으며, 그 교육내용은 신앙적인 것이 중심이나, 상당히 전인교육의 이상을 담은 것이었다.”³⁾ 종교는 교육을 통해 종교적 신념만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지성을 가르치고 인간의 덕성을 함양하는 지덕합일(知德合一)의 전인교육(全人敎育) 현장 역할을 하여 왔다. 따라서, 당시 종교의 사제나 승려들은 종교전문가이면서 사회 문화의 교양인이자 대중교육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형을 제시해 주었다.

서구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천주교 수도원이 일반교과목을 포함하여 가르쳐 왔으며,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11세기에 고등교육기관이 세워졌으며, 인도의 베딕 힌두교(Vedic Hinduism)와 우파니샤드 철학 및 자이나교(Jainism)는 종교적 신앙과 수행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일반인들에 대한 사회교육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한국사회는 삼국시대이후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유교를 중심으로 전인적 교육을 행하여 왔다. 고구려 때의 태학 및 조선조에 설립된 성균관은 유학을 정점으로 한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았고, 향교는 각 지방에 위치하여 인재

* 이 논문은 2002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 조성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사회 비평사, 1997), 209쪽.

2) 종교의례는 “넓게는 믿음에 의해 결정되는 모든 실천적 표현을 의미하며, 좁게는 종교적 인간행위의 행위 곧 예배를 의미”하기도 한다. Wach, Joachim. *Sociology of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p. 25.

3) 윤승용, 「정교분리 상황하 종교교육의 방향」, 서울: 한국종교연구회, 『한국종교연구회회보』 vol. 1 no. 1, 1989, 16쪽.

를 양성하는 교육의 산실이였다.

중세 서구 유럽사회는 전제정치하의 군왕을 중심으로 한 세속적 권력과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권위가 긴장과 갈등의 관계를 이루면서 종교중심의 사회에서 정치중심의 사회로 변화가 일어나 근대이후 합리주의의 발전과 함께 정교분리가 일반화되었다. 한국사회는 조선조말 일제의 침략과 36년간의 통치를 받으면서, 정치와 종교 어떠한 분야도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없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남북이 갈라지고, 북한에 들어온 소련과 남한에 들어온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국사회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세우는 교육의 여건을 박탈당하였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치의 세속적 권리와 신앙의 자유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정치집단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교를 활용하거나 억압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공교육의 장에서 세속적 권리를 우위에 두고 종교적 측면을 배제하는 등 정교분리의 원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원불교(圓佛敎)는⁴⁾ 소태산(少太山) 박중빈(朴重彬)에 의해 1916년에 창시되었으며, 정치와 종교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소태산은 정치와 종교를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하였으며, 한 집안의 엄부(嚴父)와 자모(慈母)의 관계로 설정하여, 자녀교육에 상호 긴밀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원불교의 2대 종법사를 역임한 정산 송규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정교동심(政敎同心)⁵⁾이라고 설정하였다. 또한, 개인·가정·사회·국가·세계를 다스리고 교화하는 데에 도치(道治)와 덕치(德治)와 정치가 함께 아울러 행해질 때, 원만한 세상이 된다고 보았다.⁶⁾ 원불교의 교육은 “세계를 진화시키는 근원이요 인류를 문명케하는 기초”로서⁶⁾, 개인·가정·사회·국가의 성쇠와 흥망을 좌우하는 것은 교육을 잘하고 잘못함에 달려 있다고 본다. 다변화하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하에서 종교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역사적 고찰과 함께 새로운 방향설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정교분리⁷⁾의 원칙에 입각한 한국 정치와 종교교육의

4) 원불교(圓佛敎)는 소태산(少太山) 박중빈(朴重彬, 1891~1943)에 의해 1916년 전남 영광에서 창시되어 1924년 익산에서 불법연구회⁸⁾로 회상을 공개하였으며, 소태산의 수제자인 정산(鼎山) 송규(宋奎, 1900~1962)에 의해 1948년 원불교⁹⁾라 개칭하여 사용하였다. 원불교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 표어를 내걸고 열원상의 진리¹⁰⁾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후천개벽의 광대무량한 낙원¹¹⁾ 세계를 이루기 위한 새종교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유·불·선 삼교의 회통과 전통종교사상의 수용과 변혁을 통해 종교혁신, 사회혁신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진 종교적 신앙과 수행의 교리 체계가 행위의 과정으로서 새롭게 정립하였다.

5)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16장.

6) 앞의 책, 「세전」, 730쪽.

관계 및 실태를 역사적 관점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원불교가 지향하는 '정교동심'을 토대로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살펴보고 종교교육의 보편적 방향성을 논하고자 한다.

II. 한국의 정교분리 정책과 문제점

종교와 정치간의 관계는 “종교집단과 정치집단의 일치, 정치 권력에 의한 종교의 이용, 정치 권력에 대한 종교의 도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⁷⁾ 종교집단과 정치집단의 일치는 정치와 종교가 미분화된 사회에서 발견되며, 이용 또는 도전의 관계는 정치와 종교가 분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의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신념 및 권위를 분리시킴으로서 국가와 종교가 상호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기독교권에서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세속권력을 대표하는 정치의 권력과 신의 권리는 교회가 대표한다는 오거스틴(St. Augustine)적인 이원적 질서관에 입각해서 해석된다.⁸⁾ 한국이 외세의 강압에 못 이겨 불완전하나마 타율적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처음 도입한 것은 개항기 한불조약에서부터이다. 윤이흠은 오거스틴의 이원적 질서관을 바탕하여 유럽의 기독교권은 “피선교지의 세속문화를 상위질서인 신의 은총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지상과제라고 믿고 선교사들이 군함에 실려 지구의 끝까지 가게 한 사상적 근거이다.”라고 보았다.⁹⁾ 정교분리의 명목아래 교회는 세속적 권력의 힘을 대변하는 무력적 함포의 힘을 이용하여 한불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일제의 한국에 대한 36년간의 통치기간동안 조선총독부는 한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을 설립하였고, 모든 교육제도는 일본의 대동아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으며, 우리의 말과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교육은 찾아볼 수 없는 체제로 변화였다. 일제 점령하에서 기독교, 불교 등 기성종교 만이 인정되었으며, 기타 민족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교들에 대해 사이비종교 또는 '유사종교'라는 명칭을 부과하여 탄압을 하였다. 일본의 신도(神道)를 중심으로 신앙을 강요하였고, 불교에 대해서는 사찰령을 시행하고 대처승제도를 도입하고 친일승려들을 조직적으로 육성하

7) J. Milton Yinge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London: Macmillan, 1970), 409-424쪽; 노길명, 「광복이후 한국 종교와 정치간의 관계 -해방공간부터 유신시기까지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27집 (2002년 여름), 1-2쪽.

8) 김용복, 「해방후 교회와 국가」, 『국가권력과 기독교』 (서울: 민중사, 1982), 238-244쪽.

9)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권1(서울: 집문당, 1986), 239쪽.

였다. 일제는 한국불교계의 총무원 제도를 중심으로 한 권력을 형성하여 중앙통제를 쉽게 하려는 제도적 변화와 함께 일본식 황도불교로 전환을 모색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시작된 동서냉전체제는 북위 38선을 기점으로 한 남북한의 분단과 함께 북의 소련진주와 남의 미국의 군정정치가 이루어졌다. 1945년 8·15광복 후 동서냉전체제의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치전략은 남북한 분단상황을 기정사실화하여 친미·반공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는 것이었다. 노길명은 미군정의 통치전략에 의한 종교 정책을 “친미·반공이데올로기의 관철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하거나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교들은 지원하고 그에 반대하거나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종교들은 억제하는 것”이었다고 본다.¹⁰⁾ 미군정의 교육정책에 참여한 이들은 상해 임시정부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건국이념으로 설정하는 작업을 통해 민족의 정신을 되살리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¹¹⁾ 그러나, 미군정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국익을 우선한 정책을 폈으며, 민족의 자주성이나 독립성보다 미국의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을 명목으로 일본식 교육 대신 미국식 교육방법을 우선적으로 정착시키는 작업을 하였다.¹²⁾

미군정은 개신교와 천주교를 선호하는 종교정책을 펼쳤다. 강돈구의 지적대로, 기독교 공인교적 정책은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에게 제한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태도로 나타났다. 미군정의 종교정책에 따라 개신교는 다종교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물적 토대를 닦게 되었으며,¹³⁾ 천주교의 경우에도 비슷한 혜택을 누렸다. 반면, 유교 및 불교 등 전통종교, 그리고 독립운동과 민족자립운동을 전개하였던 대종교와 천도교 등 자생 민족종교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도 찬성하지 않았으며 친미성향을 갖지 않았다. 따라서, 미군정은 민족종교와 전통종교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정치권력에 종속되도록 꾀하였다. 광복직후 전개된 불교정화운동의 주도세력 중 상당수의 좌익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관계로, 미군정 당국은 불교혁신운동의 주축을 이루던 조선불교혁신회를 좌익으로 지목하

10) 노길명, 앞의 글, 3-4쪽.

11) 조선교육심의회(1945년 11월 23일-1946년 3월 7일)에서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서 채택하였다.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292-293쪽.

12) 미군정은 우리 나라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초대 총장은 한국인이 아닌 해리 B 엔스테드 미 육군 대위를 선임하는 등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교육을 미국식 교육체제로 바꾸었다. 최병철, 「한국의 유교와 사회적 기능」,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9권, 1999, 15쪽; 손인수, 앞의 책, 295쪽; 김인희, 「교육목적관의 변천과정」, 『한국신교육의 발전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101쪽.

13) 강돈구, 「미군정의 종교정책」,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종교학연구』 제12집, 1993, 26-42쪽.

여 1946년 말에 해산시켰으며,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의 불교에 대한 경화유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구승과 대처승의 분류가 시작되게 하였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행해진 초법적인 정치 간섭은 불교내의 분류를 절정에 달하게 하였다. 또한, 임시정부 요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온 대종교 관련 인사들과 남한만의 단정(單政)수립에 반대하고 외국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3·1 재현운동'(1948년)을 전개한 천도교에 대한 견제가 있었다.¹⁴⁾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헌 헌법 12조에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고 명시하여, 정교분리정책을 명백히 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당시 미군정의 압도적 영향아래 미국식 정교분리 원칙만 헌법조문에 삽입했을 뿐,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간결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당시, 미군정은 한국사회에 성숙하지 않은 정교분리의 정책을 토대로 기독교를 키우기 위한 정책을 편협하게 적용시켰으며, 유교와 불교 등 전통종교들에 대한 종단 분류 조장과 정치적 대항력의 약화를 통해 국가권력에 종속되도록 만드는 분할-통제(divide and control)정책'을 시행하여¹⁶⁾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견제하면서 정치적인 활용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후, 장면정권은 짧은 통치기간동안 개신교와 함께 특히, 천주교를 선호하는 정책을 폈다.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혁명공약'에서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한다"(제1조)와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제2조) 함으로서 친미·반공이데올로기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조기 집행과 반공을 국시로 하여 정권에 위협이 되는 민간사회 및 종교단체 등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친(親) 전통종교·반 기독교적 성향이 짙게 나타났다. 노길명이 지적한 대로, 박정희 정권의 종교정책은 5.16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승인을 국가 권력이 장악하고자 하였다. 1961년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단체 및 각 종교단체들에 제도 등록의무를 부과하여 종교단체가 지니고 있는 인적 물적 역량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외형적으로 불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불교재산관리법과 향교재산법을 제정하여 불교재산과 유교의 재산을 종교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정치 권력이 종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14) 노길명, 앞의 글, 6-8쪽; 홍장화, 『천도교운동사』(서울: 천도교총부, 1990), 212-216쪽.

15) 한국종교연구회, 『한국 종교 문화사 강의』(서울: 청년사, 1998), 458쪽.

16) 노길명, 앞의 글, 9쪽.

삼은 것이다.¹⁷⁾ 물론, 개신교 및 천주교와의 긴장과 대립의 관계를 불러왔지만, 전반적으로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정치적 위기상황에서의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성명 발표를 통해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종교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태도가 나타났다. 특히, 그리스도교 신종교 계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통일교의 경우, 국제승공연합¹⁸⁾을, 새일수도원에서는 멸공단¹⁹⁾을 조직하여 활발한 반공(反共), 승공(勝共), 멸공(滅共)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¹⁸⁾

박정희 쿠데타 군사정권이 비극적인 막을 내리고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신군부는 종교계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1980년 10월 신군부가 사회정화를 명목으로 불교 조계종의 내부갈등에 직접 개입하여 전국 3천여 사찰에 대해 일제히 수색하였으며, 스님을 포함한 불교계 인사 150여 명을 연행하는 불교계의 이른바 10·27 법난(法難)²⁰⁾ 사태를 일으켰다. 유교인사들이 향교재산법²¹⁾의 관련사항을 고쳐 전국적인 유교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노력을 무산시키고 국가권력의 통제 아래 법적 장치로 기능해왔던 불교재산관리법²²⁾과 향교재산법²³⁾을 그대로 유지시켰다.¹⁹⁾ 또한, 1980년 사이비 종파규제²⁴⁾를 명분을 내세워 종교 전반을 통제하려는 종교법인법²⁵⁾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1983년의 6·20사업²⁶⁾은 3군 본부의 이전을 명목으로 계룡산 신도안 일대에 자리잡고 있던 70여개 군소 종교의 시설들을 모두 강제적으로 철거시킴으로서 자생 민족종교들의 기반을 와해시켰다. 기독교방송(CBS)²⁷⁾에 대해 보도 및 광고방송 금지조치를 내렸으며, 개신교 계열의 무인가 신학교²⁸⁾에 대한 철폐 등 초강경의 통제조치를 취함으로써 종립(宗立)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1980년대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다.²⁰⁾ 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조계종 총무원 지도부는 정치와 유

17) 노길명, 앞의 글, 13-14쪽; 윤승용, 『현대 한국종교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107쪽.

18) 기독교계 신종교들에서 반공 교육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나운몽의 용문산 기도원, 문선명의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통일교, 현 세계평화통일가정협회), 양도천의 한국기독교전도협회(후일 세계일가공회, 우주일주평화국을 거쳐 현재는 대한일주평화국), 이유성의 여호와의 새일교단 등이 있다. 통일교의 국제승공연합의 경우만 살펴보면, 공무원·기업인·군인·경찰·향토예비군·교사·학생·새마을지도자·근로자 등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하여 승공사상세미나·승공강연·승공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1979년 말 까지, 이 단체는 전국 175개 시·군과 세계 127개국에서 지부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승공교육 이수자는 총 1천 9백만 명에 이르렀다. 김홍수, 『한국전쟁의 충격과 기독교회의 기복신앙 확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1998), 103쪽; 노길명·이재민, 『통일교, 그 실상과 오해』 (서울: 사목연구소, 1991), 80-81쪽.

19)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편, 『한국의 종교와 종교법: 종교단체의 법인체 등록』 (서울: 민족문화사, 1991), 59쪽.

20) 강인철, 「민주화 과정과 종교 - 1980년대 이후의 한국 종교와 정치-」, 『종교연구』 27

탁하기도 하였으며, 개신교계에서는 '국가를 위한 조찬기도' 모임 등을 통해 권력에 유착하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반도의 남북 분단체제하에서, 해방이후 이승만 정권, 장면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 등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정부 모두가 자신의 정치이데올로기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하였으며, 종교계도 이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 한국사회의 정교관계는 정교분리(政敎分離)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황논리(狀況論理)에 따라 좌우되어 왔기 때문에 불안정한 관계가 지속되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²¹⁾ 서술한 내용이 해방이후 반세기의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²²⁾을 펼치면서 남북간의 이데올로기 갈등은 많이 완화된 반면, 남남간의 갈등은 지속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서로 다른 통치 이념과 체제를 넘어서려는 정치적 노력으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서²³⁾이후,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 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남북공동선언²⁴⁾은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치적 고위급회담과 경제 회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과 교류, 경제교류, 학술 및 문화 교류, 종교인간의 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인적 물적 교류가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2001년에 접어들면서 7대 종단이²⁵⁾ 민간통일운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있던 남한의 민간통일운동세력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6·15 일주년 기념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²⁶⁾와 8·15평양 민족통일대추진(8·15 평추)²⁷⁾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북한 사회 내에 종교의 역할과 역량을 새로운 차원으로 부각시키는 계기를 이루었다. 비록 8·15 평추²⁸⁾이 우리 사회 내의 일부 언론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 폄하되고 이를 이용한 정치세력에 의해 결과적으로 정계 개편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종교계가 남남 또는 남북간의 최악의 혼란을 막는 방과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물론, 정부주도하의 남북대화과 교류는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계기를 불러오기도 하였지만, 종교교육은 반공의 영역에서 남북분단 체제 이후의 한민족의 문화 및 종교분야의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시대의 가능성을 크게 열

(2002여름), 32-33쪽.

21) 한국종교연구회, 앞의 책, 456-457쪽.

22) 7대 종단이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등 우리 사회 내의 종교 대화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 종단 즉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을 말하며, 이들 7대 종단은 각 종단의 수장들이 이러한 종교협력기구에 직접 참여하여 종교간 상호협력과 이해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어놓았다고 평가된다.

Ⅲ. 원불교에서 본 정치와 종교의 관계 - 정교동심(政敎同心)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정책은 역사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국사회에 적용된 정교분리정책은 종교의 자유보다는 종교를 정권의 통치에 이용하려는 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국가와 자율성을 보장받으려는 종교 사이에 잠재적인 긴장이 발생”하였으며,²³⁾ 역사적·문화적 전통이 전혀 다른 이질 종교가 공존하는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어 정교분리를 적용하는 데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과거 군사정권과 정치권력의 남용에 대항하여 개신교, 천주교, 유교, 불교,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민족종교 등 종교계가 사회변동의 동기를 마련해 주거나, 변동의 매개(agent), 또는 억제하는 힘의 세 가지 형태로²⁴⁾ 서로 다른 시민종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한국 전통 종교문화 풍토나 다종교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과 서구 유럽의 기독교 중심 체제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기독교는 급속한 성장을 도모하면서 적응력이 부족한 전통종교는 과거에 비해 점차 사회적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²⁵⁾ 소수의 종교계 인사들이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 등을 위해 헌신해왔지만, 정교분리정책의 상황에서 종교단체들은 자신만의 이해를 위해 타종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소태산은 정치와 종교가 세상을 운전하는 것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수레를 운전하는 데, 두 바퀴 중 한 바퀴라도 고장이 나거나 그 운전사의 운전이 서투르면 수레를 잘 운행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였다.

종교와 정치가 세상을 운전하는 것은 수레의 두 바퀴 같나니, ... 어찌하여야 그 수레를 잘 운전하여 수레의 본분을 잃지 아니하게 할 것인가. 이는 곧 두 가지 방법이 있나니, 하나는 수레를 자주 수선하여 폐물이 되거나 고장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요, 하나는 그 수레를 운전하는 사람이 지리(地理)를 잘 알아서 그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라, 종교와 정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세상을 잘 운전하기로 하면 시대를 따라서 부패하거나 폐단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이요, 그 지도자가 인심의 정도를 맞추어서 적당하게 법을 쓰고 정사를 하여야 할 것

23) 『한국 종교 문화사 강의』, 460쪽.

24)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사회비평사, 1997), 33쪽.

25) 한국종교연구회, 앞의 책, 460-461쪽.

이니라.²⁶⁾

소태산은 정치와 종교는 각기 본분을 잃지 않고 각 영역을 담당하되,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정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시대를 따라 부패하거나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소태산은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자모(慈母)와 엄부(嚴父)로 비유하여, “종교는 도덕에 근원하여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 죄를 짓기 전에 미리 방지하고 복을 짓게 하는 법”, 정치는 “법률에 근원하여 일의 결과를 보아서 상과 벌을 베푸는 법”으로서 도덕에 근본한 덕치를 펴야 제생의세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²⁷⁾ 확신하였다. 부모의 잘하고 잘못하는 데에 따라, 자녀의 행과 불행이 있는 것 같이, 종교와 정치의 활용여하에 따라 모든 인간의 행과 불행도 달려 있다고 보았다. 각 종교의 개선은 사람들의 마음을 개선하고, 나라와 세계의 정치도 또한 개선될 수 있는 상호간의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원불교의 2대 종법사를 역임한 정산 송규는 8·15 해방 후 『건국론(建國論)』을 지어 “정신으로써 근본을 삼고, 정치와 교육으로써 줄기를 삼고, 국방 건설 경제로써 가지와 잎을 삼고, 진화의 도로써 그 결과를 얻어서 영원한 세상에 뿌리 깊은 국력을 잘 배양”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⁸⁾ 정산은 정치와 종교를 경교동심(政教同心)의 관계로 설정하여 “국가나 세계의 지도자들과 합심하여 정치 교화 양면으로 평화 세계 건설에 힘쓰자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²⁹⁾ 이러한 정산의 관점은 소태산이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설정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정산의 정치관은 중도주의(中道主義)에 근간을 두고 있다. 자력확립의 내용을 보면, “조선의 정세를 살피건대 자력확립에 바탕한 중립주의가 아니고는 도저히 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부의 단결을 주로 하고 불평불의한 조선의 정신을 새로이 찾아야 할 것”을³⁰⁾ 제시하였다. 정산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의 대립상태에서 상호 이념의 장점을 이해하고 모든 정책을 중도주의에 바탕하여 운용할 때 좌우 양쪽에 서로 불안이 없어질 것이라 본 것이다. 당시 이념의 대립상

26) 『원불교교전』 「대종경」 교의품 38장.

27) 앞의 책, 「대종경」 교의품 36장, 39장.

28) 『정산종사법어』 「국운편」 4장.

29) 앞의 책, 「유측편」 36장.

30) 프린트 영인본에는 “중립주의(中立主義)라 표기되어 있으며, 정산은 “중립정신”을 “각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잘 운용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산종사탄생백주년기념사업회편, 『평화통일과 정산종사 건국론』, (원불교출판사, 1999), 358쪽; 프린트 영인본 『건국론』, 10쪽.

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민족 동포에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공산주의로 말하면, 인류의 공도 생활에 근본 신성한 사상이거늘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자는 우선 남의 이권을 무시하고 무가 취득하는 데에만 정신이 어둡게 되나니, 이것이 어찌 공산의 원리리오. 공산의 원리는 먼저 우주의 공도를 깨쳐서 자기 사유에 애착 없는 정신을 가지며 노력의 대가 없이는 의식을 구하지 않는 의무를 잘 인식하는 데에서 진실한 가치가 드러나며,

또, 자유주의로 말하면, 인류의 평등원칙에 가장 발달된 사상이거늘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자는 우선 누구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자행자지하여 궤도 없는 생활에 빠지게 되나니, 이것이 어찌 자유의 원리리오. 자유의 원리는, 먼저 각자의 마음이 공동도덕과 통제생활에 위반되지 아니할 만한 정도에 있으며, 남의 정당한 의견, 정당한 권리를 침해 구속하지 않는 데에서 문명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³¹⁾

정산은 중도주의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구체적 방안으로, 국영과 민영의 혼합경제 체제를 제의하고 있다. 중요한 산업은 국영으로 하고 중소산업은 민영으로 하며 민영에 있어서도 정부에서는 항상 원호의 정신을 갖고 그 발전을 조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공공시설의 확충과 교육에 있어서 인재양성의 중요성과 세습법을 철폐하고 상속을 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³²⁾ 정산은 중도주의를 “過(과)와 不及(불급)이 없는 것이니 즉 상대방에 서로 권리편중이 없는 동시에 또한 각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잘 운용하자는 것”이라고³³⁾ 밝히고 국민의 정신지도에 정치와 종교가 병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³⁴⁾

31) 현대문으로 옮겨 쓴 글에는, 프린트 영인본의 『건국론』에 쓰여진 “공산주의”를 “평등 사상이나 주의”로 바꾸어 표기하였고, “자유주의”는 “자유의 원리”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평화통일과 정산종사 건국론』, 378-79쪽; 프린트 영인본 34-35쪽 참조.

32) 김용옥은 그의 논문에서 이러한 정산의 중도주의가 “오늘날의 서유럽 국가들이 지향하는 진보적”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고 이러한 정산의 노선이 해방이후 1946년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좌우합작운동을 벌였던 김구식의 中道노선과도 흡사하다고 보았다. 김영두, 「鼎山종사 建國論사상의 재조명」, 정산종사탄생백주년기념사업회편, 『평화통일과 정산종사 건국론』(익산: 원불교출판사, 1999), 187-226 쪽; 김용옥, 「송정산의 중도주의와 건국·통일론」, 익산: 한국원불교학회, 『원불교학』 2집(익산: 원광사, 1997), 605-627쪽.

33) 정산종사탄생백주년기념사업회편, 『평화통일과 정산종사 건국론』, 363쪽; 프린트본 15쪽.

34) 『정산종사법어』 「국운편」 10장, 11장.

IV. 원불교 종교교육의 이념과 실천

1. 타자녀 교육(他子女 敎育)에 나타난 원불교의 교육이념

소태산은 인권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타자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교육의 기관을 확장하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모든 후진을 두루 교육함으로써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일체 동포가 다같이 낙원의 생활을 할 것을 타자녀 교육의 강령'으로 삼았다. 그는 이러한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거 교육의 결함 조목'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 1) 정부나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적극적 성의와 권장이 없었음이요,
- 2) 교육의 제도가 여자와 하천한 사람은 교육받을 생의도 못하게 되었음이요,
- 3) 개인에 있어서도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혜택을 널리 나타내는 사람이 적었음이요,
- 4) 언론과 통신 기관이 불편한 데 따라 교육에 대한 의견 교환이 적었음이요,
- 5) 교육의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한 데 따라, 유산자(有産者)가 혹 자손이 없을 때에는 없는 자손만 구하다가 이루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하였고, 무산자 혹 자손 교육에 성의는 있으나 물질적 능력이 없어서 가르치지 못하였음이니라.³⁵⁾

소태산은 이러한 교육의 결함을 없애기 위해, 타자녀 교육의 조목'을 설정하여, 첫째는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타자녀라도 내 자녀와 같이 교육할 것, 둘째는 국가나 사회에서도 교육 기관을 널리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셋째는 교단(敎團)에서나 사회·국가·세계에서 타자녀 교육의 조목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그 공적을 따라 표창도 하고 대우도 하여 줄 것을 주창하였다.³⁶⁾ 이는, 정부와 사회차원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전반적 관심과, 교육의 평등성을 주장하여 남녀 구분과 신분차별 없이 자신의 자녀만을 가르치는 풍토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소태산의 교육정신을 토대로 정산은 “교육은 세계를 진화시키는 근원이요 인류를 문명케하는 기초이니,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성쇠와 흥망을 좌우하는 것이 교육을 잘하고 잘못함에 있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원불교의 교육은

35) 『원불교 교전』 「타자녀 교육」

36) 앞의 책.

수학기간의 학생시절에 그치지 않고 평생 실천 교육을 강조하였다. 정산 송규는 『세전』 「총서편」에서 일평생 배워야 할 도(道)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태교의 도, 유교(幼敎)의 도, 과학과 도학을 통한 통교(通敎)의 도, 가정에 있어서의 부부 및 부모·자녀와 형제친척의 도, 도문(道門)에 있어서의 신앙의 도와 신장의 도, 사회에 있어서의 남녀의 도와 노소의 도와 강약의 도와 공중의 도, 국가에 있어서는 치교의 도와 국민의 도, 세계에 있어서는 인류의 도, 노년기에 당하여는 휴양의 도와 해탈의 도, 열반기에 당하여는 열반의 도와 천도의 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³⁷⁾

2. 원불교 종교교육의 실천

원불교는 일제시대로부터 학교 설립과 함께 교육을 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여 왔다. 소태산은 원불교를 설립한 이래로 가르침을 펴오다가, 1925년부터 제자들을 대상으로 새 훈련법에 의한 첫 정기 훈련을 실시하였다. 5월에는 정산 송규의 지도 아래 10여명의 남녀가 하선(夏禪) 훈련을 받게 하시고, 11월에는 이춘풍(李春風)의 지도 아래 20여명의 남녀가 동선(冬禪) 훈련을 받게 하였으며, 이것이 원불교 정기 훈련의 시원(始原)이 되었다. 1928년에는 ‘연재양성 기성조합단’을 설립하여 인재 양성을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하였다. 그는 실제로 제자들을 남녀, 유무식(有無識), 신분차별을 넘어서서 평등한 교육을 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일제치하에서 원불교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학을 설치하여 교육을 실천하였으며, 1932년 12월 당시 간행지인 「월보(月報)」의 보고에 나타난다. “지난 월초부터 서정겸씨 주선으로 도동회우(圖洞會友) 자녀 및 그 외 자녀까지 남녀 아동 29인을 집합하여 행랑 하방에서 야학을 계속하여 열열선교(熱熱善敎)하며(담임 교수는 회원 형기씨 제 2자 운행) 대방에서는 회원 7-8인이 매일 밤 계속하여 염불 혹은 회화로 낙도심이 만만중이다.”³⁸⁾라는 기록이 처음 처음 보인다. 그후 익산에 위치한 원불교 총부에서도 야학을 통한 본격적인 교육이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기록으로 알 수 있다.

근반 남녀 아동의 문맹을 퇴치시키고 도학 상식을 가르치기 위해 수도학원(修道學園)이라고 명칭하고 야학원을 모집하니 150명에 달하였고 1935년(원기 20) 5월 31일 밤부터 개학식을 거행하고 남녀 1급, 2급에 나누어 매일밤 교수하였다. 지도선생으로 남자는 전음광, 박상권외 몇 명이었고 여자는 이공주의 몇명

37) 『원불교 세전』 「총서」.

38) 『월보(月報)』 43호 (원기 27년(1932) 12월호) (『원불교 교고총간』 1권, 414쪽).

이었다³⁹⁾

원불교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통학 불능의 무산아동을 가르쳤으며, 그 내용이 1937년 조선일보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야학을 통한 교육운동이 일제치하 말기까지 지속되었다.⁴⁰⁾ 당시, 일본어를 국어라고 통칭하여 사용하던 일제치하에서 실시한 야학운동은 민간 교육운동이었으며, 일제치하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원불교의 경전과 회지를 모두 한글로 쓴 것은 민족의 말과 정신가 문화를 일깨우는 작업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가운데, 소태산은 타자녀 교육을 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원불교는 1941년 1월 15일 불교전수학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당국에 설립 수속서를 제출했으나 일제의 방해로 취소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학원교육을 실시하던 중, 소태산 열반 후 그의 제자인 정산 송규는 1946년 해방과 더불어 유일학림'을 개설하여 수업 연한 각 3년인 중등부와 전문부의 2부 편제로 발족하여, 원불교 경전인 『정전』을 비롯한 교학(敎學)과목과 불교학을 비롯한 교양 과목들을 아울러 학습하게 하였다. 당시, 중등부 남녀 46명, 전문부 남녀 34명이 제1기로 입학하였고, 그 중 원불교 교단 장학생(당시, 콩비생'이라 부름) 31명이었다.⁴¹⁾ 유일학림은 해방이후 오늘의 원광대학교와 중단 산하의 각종 중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⁴²⁾ (표1 참조)

39) 『회보(會報)』 17호 (원기 20년(1935) 6월호) (『원불교 교고충간』 2권), 233쪽.

40) 조선일보에는 “불법연구회 문자보급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국어로 통용된 일본어뿐만 아니라 조선어, 산술, 작문 등을 가르친 것으로 보도하였다. (조선일보 소화 12년(1937) 10월 26일, 제 5910호; 『원불교 교고충간』 6권, 213쪽.) 또한, 1942년도까지 야학을 통해 아동을 교육한 기록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일제치하 말기까지 계속해서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일제침략하의 원불교 농민운동」, 익산: 원광사, 《원불교학연구》 14집, 1984, 80-83쪽.

41) 『원불교 교사』, 1104-1105쪽.

42) 원광대학교 40년사』, 40-41쪽; 김귀성, 「한국의 중등학교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 - 불교계와 원불교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3권, 1997, 129-147쪽.

표1) 원불교 종립학교의 설립연대와 현황

		설립연대								계
		1920~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 년대	
원불교 종립 학교	중학교	야학교 및 선원· 학원운영		2		1				3
	대안중 학교								2	2
	고등학 교			3		1	1			5
	대안고 등 학교							3		3
	전문대 학교					1				1
	대학교		1							1
	계		1	5	0	3	1	3	2	15

V. 원불교에서 본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1. 공교육 기관에서의 종교교육의 과제: 협의의 종교교육에서 광의의 종교교육으로

한국사회의 정교 분리 정책은 종교가 담당하였던 공교육과 사교육의 영역이 사교육으로 제한되고 모든 공교육의 과정이 세속국가에 이관되는 현상을 빚게 되었다. 윤승용은 공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주체는 세속국가이고, 교육목적이 국민정신 함양과 국가체제의 재생산이며, 국가가 인정하는 세속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것인 반면, 종교의 자유를 기반으로 설립된 종교관련 사립학교는 과거의 전통종교교육을 축소하여 담당하고, 정교분리를 기반으로 한 종교일반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그 특성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⁴³⁾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헌법과 하위법인 교육기본법⁴⁾에 잘 나타나 있다. 현행, 한국 헌법 제1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동 2항

43) 윤승용, 앞의 글, 17쪽.

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000년에 1월에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⁴⁴⁾ 공교육 기관에서 어느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할 수 없지만, 사립 종립 학교들의 종교교육은 여기에 제한을 두지 않아, 선교 또는 교화를 목적으로 특정한 종교를 가르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비록 종립종교의 종교교육은 영역은 축소되었지만 과거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별 문제가 없지만, 공교육장에서 행해져야 할 종교일반교육은 그에 알맞은 종교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교육이 담당하는 종교교육에 대해 정진홍은 ‘宗教에 관한 (Religionswissenschaft)’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교육의 종교교육의 목표는 “종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종교인을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며, 종교인을 위한 것일 수도 없다. 더구나 특정종교를 배제하거나 혹은 지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주장을 한국사회는 대체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정진홍의 ‘宗教에 관한 學’은 학문적 영역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공교육에 있어서의 종교교육은 “인간에 대한 이해, 성숙한 인간에의 지향, 그리고 인간의 삶과 역사와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것은⁴⁵⁾ 보다 더 포괄적인 종교영역이 공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에서 행하는 종교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 합의된 것은 아니며, 한국과 같은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아직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다. 국공립학교에서 인간의 문화적 현상이나 사회적 제도로서의 종교를 학문적이나 인성 교육적 차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교과서들의 내용이 편파적이거나 심지어는 잘못된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⁴⁶⁾ 정교분리의 정책을 적용하더라도 역사적으로는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교육의 현실을 돌아보면, 제 5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 중등학교에서 종교교

44)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참조.

45) 정진홍, 앞의 글, 27쪽; 36쪽.

46) 김종서는 1980년대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국민윤리〉 교과서의 종교관계 기술이 서구 기독교적 편중 경향을 보이자 불교계가 강력한 비판을 하고 나선 반면, 한국의 교육이념을 홍익인간(弘益人間) 사상으로 표방한 것과 일부 민족종교가 초등학교들에 국조 단군상(檀君像)을 건립하는 운동에 대해 거센 기독교계의 반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종서, 「한국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29쪽 참조. 최근 일어난 단군상 건립에 대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극단적으로 반발하여 단군상을 부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한국교회협의회(KNCC)는 단군상 설립을 제한적으로 할 것 등을 제안하면서 단군상을 파괴하는 행위를 비판하였다.

육이 자유선택과목으로 철학, 논리학, 교육학, 심리학, 종교학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대학 입시경쟁이 심한 현실에서 고등학교가 종교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일부 중학교에서만 선택 운용되고 있다. 다행히, 중등교육과정에서 종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둬으로써 종교교사를 양성하는 제도가 이루어졌으며, 1990년 이후 한시적으로(1990.3.1-1991.2.28)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임시교원양성소에서 92명의 종교교사를 양성한 바 있다.⁴⁷⁾ 현재는 대학에서 종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중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종교관련 학과 학생들 중에서 입학 정원의 30% 범위내의 학생에게 교직과목을 이수하게 하여 교사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⁴⁸⁾

원불교에서 지향하는 '경교동심'은 세속적 권력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종교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고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는 중심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교분리'의 정책에서 추구하는 공교육장에서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 유지와 사교육장에서의 종교자유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⁴⁹⁾ 견지하면서도, 사교육의 장 뿐만이 아니라, 공교육의 장에서도 전인적 교육을 할 수 있는 종교교육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종립 사립학교에서는 선교 또는 교화목적으로 종교의 신앙과 수행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폭을 가진다면, 공교육에서는 어느 특정한 종교를 편향적으로 신앙을 강요하거나 가르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교분리의 원칙이 잘못 적용됨으로서, 공교육 기관에서 종교자체에 대한 교육을 축소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해오지 않은 것이 한국 교육의 역사적 과정이었다. 현재, 국립서울대의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예를 들어 보면, 공교육 기관으로서 종교를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협의의 종교교육에서 광의의 종교교육을 실행할 것을 강하게 제기한다.

2. 도덕교육과 과학교육의 병진

소태산은 당시 시대를 관망하면서 크게 문명한 후천 개벽(後天開闢)의 시대를 예언하고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천명하였다. 원불교는 소태산의 일원(一圓)사상과 은(恩)사상을 중심으로 정신을 개벽하여 과거의 어둡고 불평등한 선천(先天)시대를 청산하고 새 문명시대를 맞이하고자 한다. 인류를 포함한 모

47) 윤이훈, 앞의 글, 331쪽.

48) 김귀성, 앞의 글, 129-147쪽.

49) 윤승용, 앞의 글, 17-18쪽.

든 생명을 고통의 바다로부터 구원하여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함으로서 크게 문명한 일원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원불교의 개교동기이다.⁵⁰⁾ 소태산은 돌아오는 개벽된 시대에 광대무량한 참 문명의 세계, 도덕의 세계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여 차별과 불평등에서 평등의 시대로, 신권(神權) 또는 천권(天權)에서 인권(人權)의 시대로, 상극(相剋)으로 인한 반목과 투쟁에서 상생보은과 조화의 세계로 돌리려 하였다.

소태산은 육신의 병' 또는 정신의 병'을 비유로 들어 정신과 물질이 함께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서로 조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광대 무량한 낙원세계'와 평화 안락한 세계'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태산은 또한, 다양한 사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1) 자기의 잘못을 항상 조사할 것이며,
- 2) 부정당한 의뢰 생활을 하지 말 것이며,
- 3) 지도 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을 것이며,
- 4)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써 교화를 잘 할 것이며,
- 5) 자리(自利)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아갈 것이다.⁵¹⁾

이와 같은 처방으로 치료하면, 사회의 병도 치료가 잘 될 것이며 따라서 그 병이 완쾌되는 동시에 건전하고 완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소태산은 도(道)'를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라고 하여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天道)라 하고, 땅이 행하는 것을 지도(地道)라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人道)"라 하였다. 소태산은 사람이 행해야 할 도(道) 가운데에도 부모와 자녀, 상하(上下), 부부, 붕우(朋友), 동포 사이에 육신이 행하는 길과 정신이 행하는 길 두 가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소태산은 가장 큰 道를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도"라 하여 우주만물과 모든 생명체의 근본된 도리라고 보고 있다. 德'에 대하여는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恩惠)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하나니라"고 말하고 있다.⁵²⁾ 이러한 도덕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역리(逆理)와 패륜(悖倫)의 일을 행하면서 입으로만 도덕을 일컫는다면 사회는 좋아질 수가 없다. 일의 본말(本末)과 주종(主從)의 근본을 찾아서 힘쓰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보았다.

50) 원불교 교전』 「개교의 동기」.

51) 앞의 책, 「병든사회와 그 치료법」, 88-89쪽.

52) 앞의 책, 「대종경」 인도품 1장.

정치와 종교의 조화와 병진을 체·용(體·用) 또는 근본과 활용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 즉 도덕은 정치의 체(體)가 되고 정치는 도덕의 용(用)이 된다. 정산은 “정치의 근본은 도덕이요 도덕의 근본은 마음이니, 이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을 길러 우리의 본성대로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소임”이라⁵³⁾ 하면서, 종교의 교화를 잘 받은 사람이라야 능히 훌륭한 정치가가 될 것임을 건국초기 정객들에게 충고하였다. 이런 점에서, 원불교는 종교와 도덕이 정치의 근간이 되며, 정치는 종교 즉 도덕을 바탕으로 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산은 “과학교육은 물질 문명의 근본으로서 세상의 외부 발전을 맡았고 도학교육은 정신 문명의 근원으로서 세상의 내부 발전을 맡았나니, 마땅히 이 두 교육을 아울러 나아가되 도학으로써 바탕되는 교육을 삼고 과학으로써 사용하는 교육을 삼아야 안과 밖의 문명이 겸전하고 인류의 행복이 원만하리라.”고 보았다.⁵⁴⁾ 과학교육과 도학교육의 조화로운 병진이 종교교육의 근간이 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가정·사회·국가·세계를 다스리고 교화하는 데 도치(道治), 덕치(德治), 정치(政治) 등 3방면에서 교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역할의 구분에 있어서, 도치의 교화는 곧 원리와 신앙으로 교화함이요, 덕치의 교화는 곧 인정과 덕화로 교화함이요, 정치의 교화는 곧 규칙과 방편으로 교화함이라고 구분하였다.⁵⁵⁾ 이와 같이, 원불교는 과학과 도학의 병진, 그리고 도치(道治)·덕치(德治)·정치(政治)의 조화로운 교화에 의해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3. 다종교상황에서의 보편적 도덕성 교육

소태산은 당시 학교에 다니는 제자에게 배우는 과목들 중에 수신하는 과목'이 공부의 근본이 된다고 말한다. 소태산은 “도학 공부는 모든 학술의 주인이요, 모든 공부의 근본”이라⁵⁶⁾ 하여, 당시 일제치하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신 과목만으로는 수신의 법이 충분하지 못하기에 마음 닦는 공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학교교육은 인성교육에 해당하는 도학공부와 마음 닦는 공부'를 근간으로 모든 학문의 기술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부족은 현재 한국의 지성사회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문용린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 한때 국민윤리라는 교과목 명칭 아래에서 이런 교육이

53) 『정산종사법어』 「국운편」 27장.

54) 『원불교 세전』 「교육」, 730-731쪽.

55)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17장.

56)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8장.

시도되긴 했으나, 그것은 지식의 주입 수준에 그친 것이었다. 사람을 그렇게 성장·발달'시키는 프로그램은 아니었다. 이제 대학도 바뀌어야 한다. 인성교육과 민주 시민적 자질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⁵⁷⁾ 다양한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활용하려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종교교육의 영역은 어느 특정한 종교의 신앙에 편향적이지 않으면서 종교학문, 종교문화, 성숙한 인간을 만들기 위한 인간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원만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한스 쾅은 『세계윤리구상』에서 공동의 가치·규범·태도에 대한 최소의 요구가 있어야 하지만,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종교윤리와 보편윤리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종교윤리를 넘어서는 가능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하고 있다.⁵⁸⁾ 한스 쾅의 세계보편윤리는 종교의 다원주의(Pluralism)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인류는 각 민족에 따라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종교 또한, 독특한 윤리규범을 독창적으로 가지고 있어 종교마다 긴장과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지구보편윤리의 필요성을 공감할 하지만 “어떻게 세계보편윤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질 수밖에 없다. 보편윤리란 보편성을 지녀야 하며, 누구나 지켜야 하는 절대성 내지는 최소한 대다수가 공감하고 지킬 수 있는 틀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의 사회·문화 현실의 특징에 대해, 윤이흠은 다종교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종교 현상'은 절대 신념체계의 상대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는 한국의 다종교 현상이 인류 정신문화사에 담긴 지혜의 전통들을 모두 수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종교간 갈등의 위험 부담을 안고 있음을 지적한다.⁵⁹⁾ 윤이흠은 한국의 다종교상황에서의 종교간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다음 2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종교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현대사회 정황 속에서 질서있는 상호관계의 규범을 계발하는 길이다. 그것은 현대 사회규범의 적극적인 수용을 의미한다. 둘째는 어떤 형태든지 타종교들과의 공존의 슬기에 입각해서 사회의 현존 질서를 개혁하려는 종교적 이상을 개진해야 하는 점이다.⁶⁰⁾

57) 문용린, 「大學에서의 人性 및 民主市民 教育의 方向과 課題」, 『21세기 문명사회와 대학의 도덕교육』, (원광대학교 도덕교육 국제학술대회 기념논문집), 2001, 12쪽.

58) 한스 쾅(Hans Küng), 『세계윤리구상(Projekt Weltethos)』, 안명옥 번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2. (R. Piper GmbH & Co. MG, Munchen, 1990; Benedict Press, Waegwan, Korea 1992), pp. 71-72.

59) 윤이흠, 「다종교 문화 속에서의 종교교육」, 『한국종교연구』 권1 (서울: 집문당, 1986), 277쪽.

한국의 다종교상황에서 상호관계의 규범과 공존의 슬기를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을 하나, 어떻게 종교간의 배타성과 우월적 성향을 벗어나 각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과과정에 수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적 어려움이 따른다. 김종서는 제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종교과'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만드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 “각 종단마다 각기 다른 자신의 특정 종교의 신행(信行)만을 가르치던 종전의 내용을 지양하여 모든 학생, 심지어는 일반 학교의 무종교인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교과내용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보편적인 종교 이론과 종교 문화전통에 관한 내용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중심으로 두고 편정하였다.⁶¹⁾

이재일의 지적대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학교교육과 종교의 분리로 나타났으며,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제도가 형성되면서 공립학교는 법적으로 학교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하여 종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⁶²⁾ 정응섭은 유럽과 미국의 정교분리의 원칙이 교육에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유럽사회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약하게 적용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공립학교에서는 철저히 종교교육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⁶³⁾ 이러한 평가를 내리기 앞서 '종교교육'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도 어떤 특정한 종교를 신앙적으로 강요하거나 가르칠 수 없지만, 종교학, 신학, 종교철학, 종교문화 및 종교예술 분야 등 학문적·문화적 영역을 공교육의 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VI. 결론

원불교는 정치와 종교를 수레의 두 바퀴와 한 집안의 엄부(嚴父)와 자모(慈母)의 관계로 보았다. 또한, 정치와 종교는 정교동심(政敎同心)'의 관계로서 종교는 정치의 근본이다. 원불교는 교육을 세계 진화의 근원이요 인류문명의 기초로 보았다. 교육여하에 따라, 개인·가정·사회·국가의 성쇠와 흥망을 좌우된다고 여긴다. 다변화하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하에서 정치는 종교를 통치의 이용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도치(道治)와 덕치(德治)를 함께 해 나가야 새로운 문명사회를 이룰

60) 윤이흠, 같은 책, 278쪽.

61) 김종서, 같은 글, 32-34쪽.

62) 이재일,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5권, 1998, 205-206쪽.

63) 정응섭, 『현대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107쪽; 이재일, 앞의 글, 206쪽 참조.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다양한 종교상황에서, 종교다원주의(Pluralism)는 종교의 다양한 개체의 현상에 있어서 그 차이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는 각 종교마다의 독특한 종교문화와 구원관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난다. 하나는 각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노력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종교적 교리와 문화체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종교교육에 활용하는 것이다.

종교간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를 들면, 한스 쾅의 입장은 종교마다 가지는 독특성을 인정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약수를 찾아야 하는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하고 들어가고자 하였다. 이런 최소한의 공약수를 찾고자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며, 종교교육의 영역을 공통적이지만 스스로 최소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진홍, 윤이흠, 김종서 등의 종교학자들의 기본적인 태도 또한 종교교육의 편향성과 갈등의 위험을 넘어서기 위해 최대의 공통분모를 공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태도와 경향은 종교다원주의에 입각한 종교교육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키는 것이라 본다. 각 종교의 교리, 사상, 문화, 예술, 신화, 상징, 의례 등 실질적으로 신앙적인 요소라고 여겨지는 것에서 조차, 편향적이지 않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종교학, 신학, 종교철학, 종교문화 및 종교예술 분야 등 학문적·문화적 영역과 도덕적 심성과 전인교육을 위한 종교적 내용이 공교육의 장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종립 사립학교와 국·공립 학교간의 학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학교에서 모든 수업을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며, 각 분야별로 뛰어난 교수들의 강의를 듣고 종교교육의 비교학적 연구와 효과적인 학업을 위해 종교관련 대학부터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학생교류, 공동수업, 타대학 수업인정 및 학점인정 등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 강돈구, 「미군정의 종교정책」,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종교학연구』 제12집, 1993: pp. 26-42.
- 강인철, 「민주화 과정과 종교 - 1980년대 이후의 한국 종교와 정치-」, 『종교연구』 27 (2002 여름): pp. 25-57.
- 강태중, 「정산종사의 교육사상」, 『원불교사상』 24집(2000년 12월): pp. 71-92.
- 교사편찬위원회, 『원광대학교 40년사』, 익산: 원광사, 1987.
- 김귀성, 「종교교육과 인간성 회복」, 『정신개벽』 14집 (신용교학회, 1995): pp. 9-28.
- _____. 「한국의 중등학교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 - 불교계와 원불교를 중심으로 -」,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3권. 1997: pp. 129-147.
- 김영두, 「鼎山종사 建國論사상의 재조명」, 정산종사탄생백주년기념사업회편, 『평화통일과 정산종사 건국론』,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9: pp. 187-226.
- 김용복, 「해방후 교회와 국가」, 『국가권력과 기독교』, 서울: 민중사, 1982.
- 김용욱, 「송정산의 중도주의와 건국·통일론」, 익산: 한국원불교학회, 『원불교학』 2집, 1997, pp. 605-627.
- 김인, 「종교와 교육」, 서울: 한국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회, 《도덕교육연구》 제11집, 1999: pp. 191-208.
- 김인희, 「교육목적관의 변천과정」, 『한국신교육의 발전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김중서, 「한국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 서울대학교종교학연구회, 『종교학연구』 vol. 20(no. 1), 2001: pp. 27-40.
- 김홍수, 『한국전쟁의 충격과 기독교회의 기복신앙 확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1998.
- 노길명, 「광복이후 한국 종교와 정치간의 관계 -해방공간부터 유신시기까지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27집 (2002년 여름): pp. 1-23.
- 노길명·이재민, 『통일교, 그 실상과 오해』, 서울: 사목연구소, 1991.
- 문용린, 「大學에서의 人性 및 民主市民 教育의 方向과 課題」, 『21세기 문명사회와 대학의 도덕교육』, (원광대학교 도덕교육 국제학술대회 기념논문집), 2001.
- 박광수, 「일제침략하의 원불교 농민운동」, 익산: 원광사, 『원불교학연구』 14집, 1984: pp. 59-87.
- 박범진,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교육의 자유」, 『牧會』, 1995.
-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 송규, 『건국론』, (익산: 프린트 영인본), 1945.
- 양건, 「국가와 종교에 대한 법적인 고찰」, 『국가권력과 기독교』, 민중사, 1982.
- 원불교 정화사, 『원불교 교고충간』 1-5권, 익산: 원광사, 1969.
- _____. 『원불교교사』, 원불교전서,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9(1977 초판).
- _____. 『원불교교전』, 원불교전서,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9(1977 초판).
- _____. 『정산종사법어』, 원불교전서,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9(1977 초판).
- 윤승용, 「정교분리 상황하 종교교육의 방향」, 서울: 한국종교연구회, 《한국종교연구회회보》 vol. 1 (no. 1), 1989: pp. 15-18.
- _____. 『현대 한국종교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권1, 서울: 집문당, 1986.
-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사회비평사, 1997.
- 이재일,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5권, 1998: pp. 201-219.
- 정산종사탄생백주년기념사업회편, 『평화통일과 정산종사 건국론』,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9.
- 정응섭, 『현대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정진홍, 「공교육과 종교교육」, 서울: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2집, 1986: pp. 21-37.
- 최병철, 「한국의 유교와 사회적 기능」,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9권, 1999: pp. 6-24.
- 최종고, 「정교분리원칙의 한국적 의미」, 『현대사회』 25, 1987.
-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편, 『한국의 종교와 종교법: 종교단체의 법인체 등록』, 서울: 민족문화사, 1991.
- 한국종교연구회, 『한국 종교 문화사 강의』, 서울: 청년사, 1998.
- 한스 쿡(Hans Küng), 『세계윤리구상 (Projekt Weltethos)』, 안명옥 번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2. (R. Piper GmbH & Co. MG, Munchen, 1990; Benedict Press, Waegwan, Korea 1992.)
- 홍장화, 『천도교운동사』, 서울: 천도교총부, 1990.
- J. Milton Yinge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London: Macmilan, 1970.
- Wach, Joachim. Sociology of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Politics and Religious Education in the perspective of *Won-Buddhism*(Wonbulgyo)

Park, Kwang-soo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In ancient human societies, religion, as the foundation of human civilization, and the State were unified. Religion had an important role of spreading religious beliefs by educating people to develop a holistic character that was connected with the universal intelligence and with human virtue.

Although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was established to secure both the right of politics and the freedom of beliefs, political groups have either utilized or suppressed religions. Politicians have also wrongly applied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by excluding religious aspects in public schools.

In the perspective of *Won-Buddhism*, politics and religion are inseparably related. Sot'aesan, the founder of *Won-Buddhism*, emphasized that politics and religions should closely cooperate to educate people, lik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s to that between two wheels of a carriage or between a strict father and a loving mother. Master Chöngsan, in describ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s, said "the same mindedness of politics and religions"(政教同心). Education in *Won-Buddhism* is considered the root of the world's progress and the foundation of human civilization.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rise or fall and prosperity or decline of an individual, a family, a society, and a nation depends on whether or not people are well educated.

A religious education should be based upon religious pluralism and should maintain impartiality and objectivity without political or religious bias. Though the public school should certainly not be the mission field, we must not exclude or downscale the area of relig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It is essential to educate human morality in order to nurture one's whole personality. It is also essential to teach religion in the field of religious studies, theology, religious philosophy, culture and arts.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enhance the educational program in the field of religion,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mutual exchange program among students, as well as programs and credits between the public or private schools.

Key words: *Won-Buddhism*, politics, religious education,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the same mindedness of politics and religions, religious pluralism.